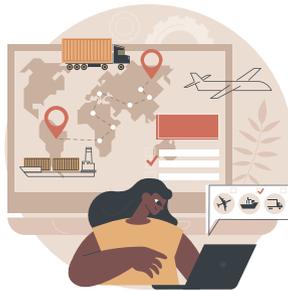


TRADE & ORIGIN REPORT



01

TRADE & ORIGIN 동향

- ① 한국원산지정보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무협약 체결
- ②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 ③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수출기업 지원 강화
- ④ 관세청,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개최
- ⑤ 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케이(K)-뷰티 수출확대 지원
- ⑥ 세계 FTA 동향
 - (1)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 (2) 한·에라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
 - (3) 일본, 아프리카와 FTA 추진





TRADE & ORIGIN 동향

한국원산지정보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무협약 체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효함에 따라 수출에 있어 원산지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과 코트라가 국내 수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코트라는 8월 19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세·원산지 정보 수집과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관세·원산지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보고서와 분석자료를 공유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관세·원산지·자유무역협정(FTA)·통상 규제 동향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공유 대상에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를 비롯해 '무역·원산지 리포트' '해외 원산지 동향 보고서'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코트라는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국가별 진출전략'

‘해외시장보고서’ 등을 공유한다. 또 양 기관은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교육과 함께,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원산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양 기관이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관세·원산지·FTA 등 우리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반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코트라의 ‘관세대응 119’ 상담창구에 6,625건의 문의가 접수될 만큼,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며 “코트라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발 관세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무역통상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망이 한층 넓어진다. 관세청과 코트라는 2025년 9월 23일(화)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발 관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진 : 관세청

코트라는 앞서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관세청과의 협력으로 대미 수출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 소속 관세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며, 해외 규제 정보 수집·전파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설명회와 세미나를 열어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기업 대상 정보 제공에 나선다. 특히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리는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코트라와 국가 관세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관세청이 중소기업 관세 애로 해소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는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국내 주요 지역 조직 간 협력망도 연계해,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히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코트라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확대로 인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코트라는 정부의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 애로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9월 22일(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출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과 항공기, 자동차부품, 강판, 화장품 등 미국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관련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2025년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가 9월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관세대응 119 플러스’는 기존의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 기능을 넘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진 : 산업부



애로 해결과 신규 서비스로의 환류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 무역보험공사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코트라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은 “우리 원이 보유한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관련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이 CBP E-ruling을 신청할 때 기존 사례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발맞추어 원산지정보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개최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기업을 초청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했다.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역내 무역원활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아·태지역 관세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며, 특히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과 관세행정 혁신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공급망 관리에 신기술을 적용한 경험과 인공지능(AI)을 통한 미래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7월 28일(월)과 29일(화)에는 전자상거래 워크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민간 대화, 그리고 국제원산지 세미나가 통관절차소위원회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전자상거래 워크숍에서는 글로벌 동향과 각국 세관의 과제를 공유하고 신기술 도입과 민관 협력을 통한 전자상거래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민간 대화에서는 공공·민간 간 데이터 연계, 신기술을 통한 공급망 위험관리,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의 도전과제 등을 주제로 세관과 민간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원산지 세미나에서는 각 APEC 회원의 원산지 검증 절차를 소개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우리 기업이 원산지 관리부터 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운영팀 전대웅 과장은 “Utilizing FTA-PASS for the Accurat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을 주제로 발표하며,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 개발해 무상 보급 중인 FTA-PASS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불달라면 원산지 판정 사례를 통해 재료별 원산지 기준의 자동 적용과 결과 확인 과정을 시연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를 강조했다.

7월 30일(수)부터 8월 1일(금)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급망 관리 혁신 ▲관세행정 디지털화 ▲글로벌 무역의 포용성 증진 ▲세관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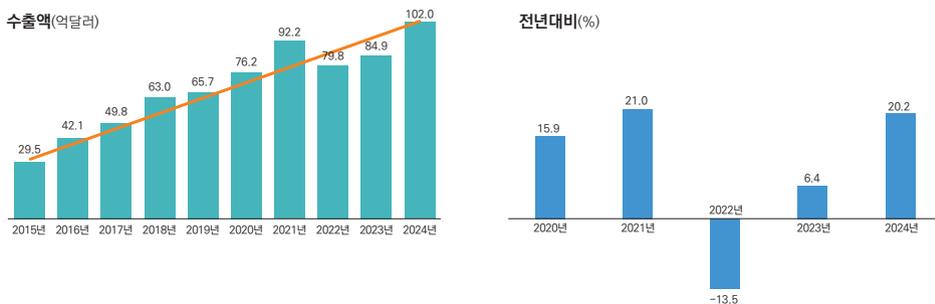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통상환경이 다극화되고 불확실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관세행정 체계 개편을 이끄는 전략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통관절차소위원회를 통해 AI 관세행정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APEC 회원들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 관세행정 효율화와 무역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케이(K)-뷰티 수출확대 지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케이(K)-뷰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뷰티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입증자료 부족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류 수출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수입액
2015년	2,948	1,524	1,424		
2016년	4,212	1,536	2,677	42.9	0.8
2017년	4,984	1,636	3,348	18.3	6.5
2018년	6,300	1,731	4,570	26.4	5.8
2019년	6,573	1,694	4,879	4.3	△2.1
2020년	7,615	1,530	6,085	15.9	△9.7
2021년	9,217	1,696	7,521	21.0	10.9
2022년	7,976	1,754	6,222	△13.5	3.4
2023년	8,486	1,742	6,744	6.4	△0.7
2024년	10,199	1,718	8,482	20.2	△1.4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FTA를 활용하기 훨씬 쉬워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물품(8종)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1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만 각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수출업체는 자사 제품이 각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왔다. 현재까지 지정된 품목은 326개이며, 이번 개정으로 17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 원산지간이확인대상 17개 선정 품목〉

연번	HSK	HSK 품명	연번	HSK	HSK 품명
1	2833.24-0000	황산니켈	10	3917.32-1000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
2	3304.10-1000	립스틱	11	3917.32-2000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	3304.20-1000	아이새도	12	3923.40-0000	플라스틱으로만든 스펀·폼·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3304.20-9000	마스카라	13	6804.21-0000	그라인딩휠
5	3305.30-0000	헤어 래커	14	8209.00-109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공구용 팁
6	3306.10-1000	치약	15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7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16	9004.10-9000	선글라스
8	3307.90-4000	마스크팩	17	9603.21-0000	칫솔
9	3404.20-0000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위 선정 17종 품목에 대한 품명·활용대상 협정·국내 필수 공정·비고(제외 대상) 등의 세부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FTA 동향

①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우리나라와 영국은 2025.8.18.(월) 서울에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 SED)」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하였다.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경제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 전반을 총괄하는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이며, 2023년 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양측은 ▲ 교역·투자 ▲ 경제안보 ▲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 인공지능(AI) 및 양자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 방산협력 ▲ 에너지·문화 등 경제 관련 양자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영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및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우호적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 : 외교부



양측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등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AI·양자·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내 협력, 한-G7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 기후·환경 국제 협약 이행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며, 영국은 한국의 CPTP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사 입장국인 양국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핵심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2일 서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내용에 환경, 노동, 공급망, 의료 등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추가하여 보완한 협정이다. 한-에콰도르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전체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번 서명으로 한-에콰도르 SECA는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루게 된다. SECA 발효 후,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 자동차는 15년 내(하이브리드차의 경우 35%, 5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20년 내 철폐), 일본(FTA 미체결)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유리한 시장 접근 여건을 확보할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관세율 20%, 10년 내 관세 철폐), 라면(30%, 10년) 등 소비재와 의약품(5%, 즉시)의 관세도 철폐돼 관련 수출확대가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기대된다. 더 나아가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되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의 소비 및 수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콰도르의 관심 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기존 FTA 범위 내에서 개방이 이뤄진다. 다만, 에콰도르산 새우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유망 투자처이자 자원 부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유 매장량은 중남미에서 3위이며, 구리, 아연, 은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남미 투자·진출 거점으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 시 공조, IT·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③ 일본, 아프리카와 FTA 추진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검토에 나선다. 케냐 등 물류의 요충지가 되는 동부와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등이 우선순위다.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은 8월 17일 일본 정부가 8월 20~22일 요코하마에서 개최하는 제9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산학관이 참여하는 검토기구를 설치해 약 2년간 경제협력의 효과나 과제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케냐·탄자니아를 비롯한 동부 아프리카 8개국으로 구성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협상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 케냐는 항만 등이 정비돼 동아프리카의 물류 허브로도 불리며, 이 지역과 인도양 및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망을 강화해 자국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도 협상 후보로 거론된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강국이고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물류·공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사진 : 매일경제

일본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일본 산업의 주축인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에서 내륙국가로 육로를 통해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여러 나라를 통관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관세가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 아프리카 수출입 규모는 각각 1조3000억 엔(약 12조3000억원) 수준이다.

일본 수출은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많고 수입은 광물자원 비중이 높다.



사진 : 매일경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는 중국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FTA 선진국인 한국 등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 한국은 지난해 탄자니아·모로코·케냐와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

닛케이는 “아프리카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게 일본 정부의 최종 목표”라며 “각국 관세를 철폐해 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하는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정돈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50개국을 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도 FTA나 EPA를 맺고 있지 않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와 유럽, 태평양 지역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적극적으로 체결했지만, 아프리카와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8월 20일 열린 TICAD는 일본 정부가 주도해 유엔,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함께 1993년부터 아프리카 각국 정상 등 대표급을 초대해 개최해온 회의다. 원래는 5년마다 열리다가 현재는 3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9회 회의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잇는 물류망 정비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